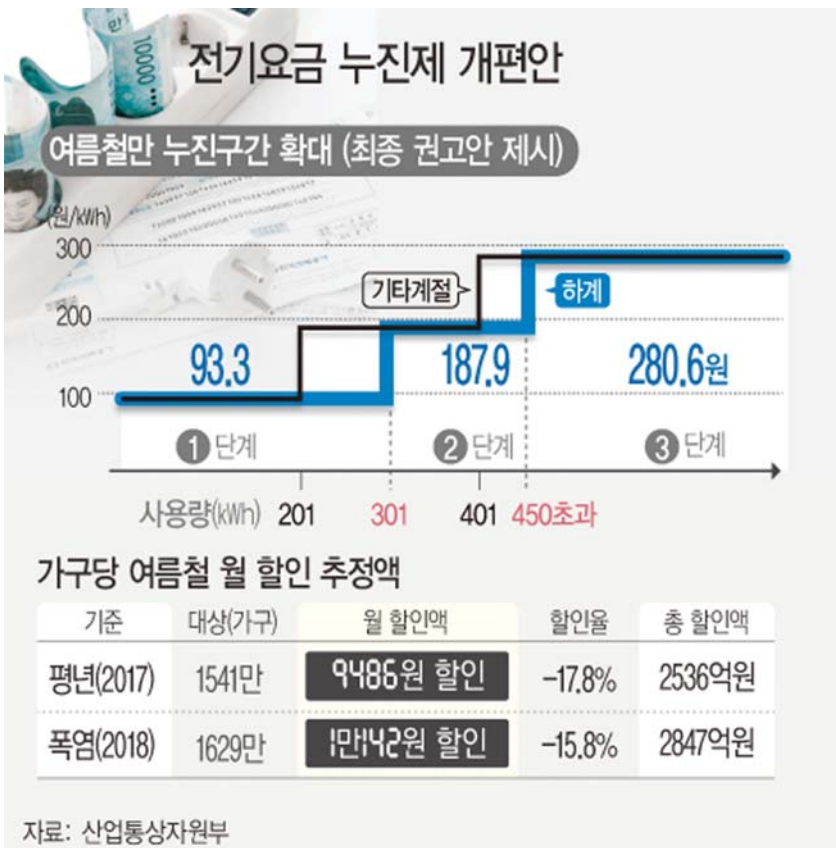


한전, 여름철 전기료 내린다...1600만가구 월 1만원 할인

임시 이사회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 의결 1629만 가구 월 1만42원씩 할인 적용 예상



한국전력공사가 누진제를 완화해 매년 7~8월마다 전기요금을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한시적으로 1600만 가구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도 전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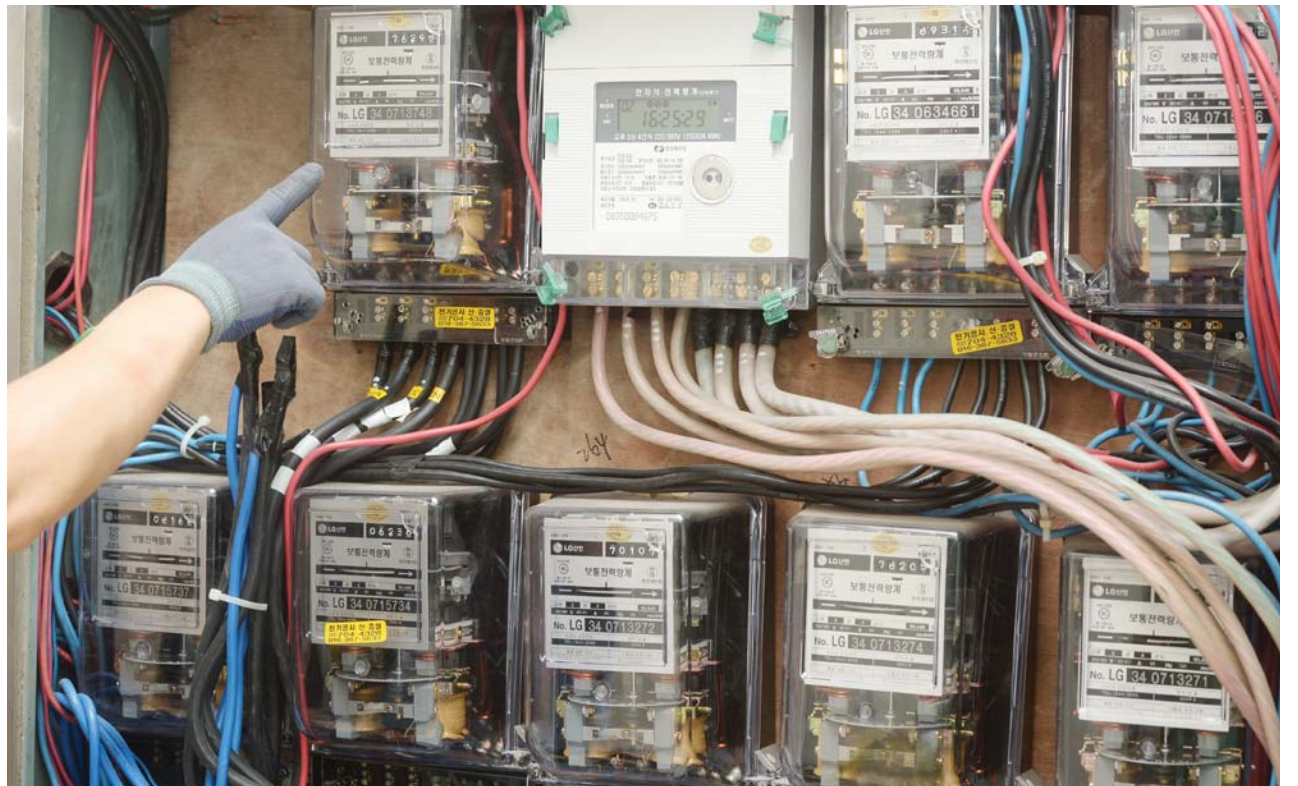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 단체와 화계,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간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약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됐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기요금제도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시행이 늦어져도 7~8월 전기요금은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거에도 전기요금 할인을 소급 적용한 바 있다.

누진제 TF는 누진 구간을 넓히면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액은 월 1만42원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요금 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현행 누진제를 살펴보면 1구간(200kWh 이하)에서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은 각각 1kW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한다.

이번 누진제 완화안을 적용하면 1구간이 300kWh 이하로 조정된다. 즉, 사용량 3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으로 매긴다. 2구간과 3구간은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이번 전기요금 할인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847억원으로 추정된다. 누진제 개편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기준 1조4144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긴 기업이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주주들은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이사회에서 쉽사리 전기요금 인하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주주는 경영진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로펌에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 개정안과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일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료 결국 낮춘 정부, 다음 순서는 산업용 인상?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적자 기업'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켰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은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전 이사회가 통과시킨 것은 현

재 누진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장 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름철 전기 1kWh당 가격이 100원(1단계)에서 200원(2단계)으로 오르는 기준이 기존 201kWh에서 301kWh로 늘어난다. 200원(2단계)에서 300원(3단계)으로 오르는 지점은 401kWh에서 451kWh로 바뀐다. 이런 요금표가 도입되면 1629만 가구가 1만42원씩 전기료 부담을 든다. 할인 추정액은 총 2847억원이다.

이 부담은 우선 한전이 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요 자원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

않다.

문제는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전년 동기(1276억원) 대비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갑순 한전 재무처장은 1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에 관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비

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드는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할인액 부담까지 한전이 지게 되면서 재무 구조는 더 나빠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료처럼 표시와 직결돼있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정부로서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손을 댈 유인이 큰 셈"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의 설명처럼 올해 1~3월 전력 소비량 중 가정용은 13.0%에 불과하다. 산업용은 52.2%, 상업용은 27.8%다.

다만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손을 댈 경우 '기업 경쟁력 훼손'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강 반도체, 정유 업계 등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

상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하다는 점도 인상에 걸림돌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0.0985달러로 OECD 평균(0.1027달러)과의 차이가 0.0042달러(약 4.85원)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0.1091달러로 OECD 평균(0.1659달러)과 0.0568달러(약 66.60원) 차이난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려면 원가 회수율이 낮은 가정용 전기요금부터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증대 문제는 복지 재정을 이용해 지원하면 된다"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1만원 깎으려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1629만가구, 월 1만원씩 할인...한전, 2847억 부담
"적자 해소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손 댈 유인 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